

카카오택시 놓고 돌로 나뉜 광주 택시기사

카카오 가맹사업 참여 두고 갈등 속 서로 탄원서 내며 법정 공방 “배차 불이익에 수익 급감” vs “사납금 없어 안정적 월급 보장” 택시조합 제명 조치에 19개 회사는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맞서

‘카카오 택시’를 둘러싼 택기 기사들의 치열한 서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법원이 광주지역 19개 택시회사가 광주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광주택시조합)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에 불복,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택시 기사들이 카카오택시 서비스 가맹사업 참여를 놓고 돌로 나뉘어 법정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택시기사들 수천명은 양측으로 나뉘어 탄원서 등을 내며 상대방 입장을 반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카카오택시, 이래서 안돼=광주택시조합 조합원 측 운전기사 1200명은 10일 카카오 택시 가맹사업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탄원서를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택시조합과 광주시지역택시노조,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택시 노동자 3단체 대표를 비롯, 무려 1200명의 기사들이 탄원

서에 서명을 했다.

앞서 광주지역 19개 택시회사는 카카오 T블루 서비스 가맹사업의 참여를 금지한 택시조합의 결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법원에 제출했었다. 법원 측은 조합의 결의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며 가맹 참여 회사 측 손을 들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모든 조합원이 카카오T블루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는 구조로 가입기사(카카오T블루)에게만 콜을 몰아주고 있어 비가입 기사는 수입 감소”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콜 배차 배분이 카카오T블루 택시에 몰리면서 하루 약 3000~5000건 콜 배차가 감소했으며, 피해액은 하루 1500만~2500만원, 한 달 4억5000만~7억5000만원에 이른다는 게 택시조합측 설명이다. 이들은 카카오T블루 가입 택시 대수가 늘

어날 수록 피해액은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래서 필요해=카카오 가맹사업에 참여한 회사 소속 운전기사 400명도 같은 날 반박 탄원서를 법원에 냈다.

조합측이 주장한 피해액은 비가입회사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잘못 만나 발생하는 수치적 계산이라며 현 조합의 분쟁과 갈등은 “현명한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한 사업주의 몫”이라는 주장이다.

또 “현재 여객 운송사업은 운송 플랫폼 시대이고, 이를 통해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시대”라며 “택시조합 이사회는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노조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야 할 탄원서 제출 여부를 이사회가 결정할 것은 이해할 수 없고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택시노동단체 관계자는 “4차산업 혁명 시대에 플랫폼 택시산업은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카카오가 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공지능 배차에 밀려 가입기사가 10시간 동안 18만~19만원 벌 때 그렇지 않은 기사는 8만원 정도로 수입이 반토막 났다”고 말했다.

또 “택시조합 조합원 회사가 카카오T블루 가입 택시를 균등하게 나눠 운행하는 대화적 방법으로 논란을 풀어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가맹사업자인 GJT모빌리티 김주환 대표는 “카카오T블루 운행 한 달을 맞아 기사 월급을 분석한 결과, 하루 10시간 교대 근무하는 기사의 경우 대체적으로 250만~260만원의 월급을 받아가는 것으로 나왔다”며 “고질적인 사납금 없이 4대보험·퇴직금 등을 포함한 정규직 월급제로 기사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9일 시범사업을 통해 무료로 운영했던 ‘카카오T블루’ 서비스는 오는 7월1일부터 이용료 1000원을 받으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6월 현재 택시조합에 가입된 76개 법인 가운데 3분의 1에 달하는 25개사가 ‘T블루’ 가맹사업에 동참한 상태다.

350대의 T블루 택시가 운행 중이며 GJT모빌리티는 이달 말까지 400대를 추가 운행, 연말까지 1000대로 운행 규모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승용차 파손한 화물차 구호조치 없이 현장 이탈 “14.5 t 대형차 교통사고 인식 못해” 무죄

14.5 t짜리 화물차 운전자가 유턴을 하다 500만원 넘는 수리비가 나올 정도로 승용차를 충격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화물차 운전자가 사고를 낸 줄 모른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광주시광산구 첨단과기로 모 주유소 앞길에서 비아 지하보차도 방향으로 유턴하다 2차로에 정차중이던 승용차를 충격한 뒤 적절한 구호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차량은 운전석 뒷문 및 펜더가 파손돼 수리비로 590여만원이 들었고 타고있던 운전자도 2주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1심은 그러나 “A씨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걸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A씨 차량은 14.5 t 대형화물차로, 유턴 과정에서 화물차 조수석 뒤 적재함 끝부분이 승용차 운전석 뒷문 등을 들이받았지만 일부 급한 흔적만 남았고 사고 발생 이틀이 지나도록 그대로 수리하지 않고 있었던 점, 음주 정황도 없고 화물차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등을 들어 사고가 난 줄 알고도 굳이 현장을 이탈할 이유가 없다는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피해자가 “A씨가 사고 직후 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정차할 것처럼 행동하다가 갑자기 속도를 올려 진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과 관련, 재판부는 “유턴을 하는 차량의 자연스러운 운행 행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들어 “A씨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미발적으로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동료 상대 10억대 사기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동료를 상대로 10억대의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공사에 따르면 나주지역 본사 소속 직원 A씨(7급·사무원)가 동료들에게 거짓말을 해 거액을 가로챘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A씨는 현금으로 자동차 구입 비용을 내면 공장에서 출고한 신차를 30%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동료들에게 거짓말해 수십억원의 자동차 구입비용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20여명이 이런 방식으로 10억원이 넘는 돈을 건넸는데 몇 달 동안 자동차를 넘겨받지 못하자 민원을 제기했고 일부는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특정 자동차 회사 관계자와 친분이 있어서 신차를 싸게 살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사표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직원들끼리 발생한 문제라 회사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수준”이라 “다음주 감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여름 대학 교정 체험학습 나온 아이들

11일 오전 광주시 북구 전남대학교에서 체험학습을 나온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아이들이 메타세쿼이아길을 걷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주택조합 중복분양 사기 피해자 늘어날 듯

광주시 동구 지산주택조합 아파트 분양 사기 (광주일보 2020년 6월 11일 6면) 피해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해당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대출 서류 등을 확보해 조사에 들어갔다.

양우천 광주동부경찰서장은 11일 “지산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양권을 확

보, 양도해줄 것 피해자들을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사건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는 모두 53명으로 이들이 지급한 계약금을 합한 피해액은 40여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양 서장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피해 최

소화와 회복을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능·사이버수사·경제팀 등 12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업무대행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중이다.

경찰은 또 업무대행사들의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이뤄진 범행으로 보고 관련 자들에 대한 휴대폰 위치 추적 등으로 소재 파악에 들어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화순군 난개발 막으려 1년전 조례 만들었는데 풍력발전소 건설 쉽게 조례안 바꾸려는 군의원

재생에너지 거리 제한 완화 발의
동북 주민들 “개정 반대” 집회

화순 군의원이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신재생에너지 거리 제한 기준을 대폭 완화한 조례안을 발의,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1일 화순군에 따르면 동북면 주민들은 12일 군청 앞에서 ‘모후산 풍력발전 사업 철회’ 및 관련 조례안 개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주민들은 지난 2018년부터 모후산 풍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풍력발전소 건설을 용이하게 하는 일부 군의원

이선 군의원은 최근 풍력발전소 이격 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제 239회 정례회’에 상정한 상태다.

해당 조례안은 발전시설 허가를 내줄 수 없도록 한 거리 제한 기준을 기존 10가 구 이상 거주하는 마을에서 2km이내에서 700m이내로 대폭 완화한 게 핵심이다.

또 10가구 미만 거주하는 마을의 경우 기존에는 1.5km 이내에는 풍력발전소를 설

치할 수 없도록 했지만 개정 조례안은 500m 이내로 완화했다.

주민들은 “주민 피해는 고려하지 않고 사업자 편의만 챙긴 조례안”이라며 “군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군의원이 사업자 입장에서 조례안을 만든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화순군이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취지로 1년 전 만든 조례안과 정 반대 조례안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군 정책 과도 못지 않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당시 소송 및 전자파 피해 발생 우려, 환경파괴, 주민갈등 우려 등을 감안해 풍력발전소 허가기준을 제시한 조례안을 제정한 상태다.

풍력발전소 건설업체가 지난 2018년 화순군에서 개발허가를 신청했다가 조례안 기준에 따라 반려됐던 점을 고려하면 조례안 개정에도 따라 풍력발전 설치가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이선 군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대안으로 신재생 에너지 시설 확대 보급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를 완화해 관련 시설을 설치,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혹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짝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